

정신질환자 자립·회복 돕는 '첫마중' 개소

전주시·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역 앞 '회복지원공간' 운영...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전주지역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전용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자립과 회복 지원을 위해 전주역 앞 회복지원공간인 '첫마중'에서 개소식을 15일 가졌다.

회복지원공간은 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며 구축한 공간으로서, 교육실과 부서 회의실, 상담실, 카페테리아, 쉼터의점 등 직업체용 공간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자치활동이 보장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이 됐다.

이를 통해 추후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산, 유효기간 확인, 정리하는 방법 등을 회복지원공간 직원과 함께하며 직업체용을 미리 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무가 행정업무로 문서정리, 한글 및 엑셀 파일 작성 등을 미리 해보면서 직업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첫마중'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자립과 회복 지원을 위해 전주역 앞 회복지원공간인 '첫마중'에서 개소식을 15일 가졌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 만성 질환자 중 자 타해 우려가 적고,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취업 지원, 자립체용을 운

영, 동료지원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지원은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 관리(은행 이용하기, 저축하기 등), 전자기기(스마트폰 사용하기, 키오스트 이용하기) 등이며, 건강지원은 정신질환자의 증상 관리, 질병 예방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에 대한 동기 부여해 건강하고 구체적인 삶 도모(약물복용, 약물교육, 신체건강과약, 식단관리-식사제공, 요리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에선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구직을 경험하며 경제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지원은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을 향상(자립체용 2곳 운영중)시키고 회원자치활동은 휴게실, 식당, 사무실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식사 준비, 정리, 주간 프로그램 등을 경험해 자립을 도모하게 했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회복지원공간 개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립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첫마중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저소득층 사회보장기금 용자 지원

전주시, 생활 안정·자립기반 마련 돕기 위해

전주시가 사회보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용자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예산 약 1억6000만 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 대상이며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부채상환금 등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무이자 1년 거치 2년 상환한다.

또 자조자립자금은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 의욕이 강해 자립이 가능한 자로, 창업비와 재활기구 구입비 등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

지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이자율은 2%이지만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 6%가 가산된다.

사회보장기금 용자를 원하는 가구는 대부분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갖추고 해당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진료비내역서, 사업계획서 등)를 첨부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5명 시관전자)를 통해 용자 신청의 타당성과 용자금 상환능력 여부 등을 심의 검토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용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승화원, 윤달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확대

하루 4구 → 최대 18구까지 실시... 화장 한 달 전 예약 가능

전주승화원이 윤달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리고 있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윤달 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을 하루 4구에서 최대 18구까지 확대 실시 할 예정을 15일 밝혔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해 22일(시)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화장 예정

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먼저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은 "윤달기간 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윤달기간에 승화원 전직원이 특별 근무에 나서는 등 유골 화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경 기자

위기청소년 맞춤 지원·발굴 논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1차 회의 가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23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덕진Wee센터에서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실무회의를 통해 '2023년 전주시청소년안정망 중점사업계획'의 보고를 듣고, '위기청소년을 지원 기관 조사 및 발굴(2023년 중점사업계획 공

유의 건)'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더불어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뤄졌던 공동사업인 연합아웃리치의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 및 청소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시민참여) 현황 리플렛을 제작해 공유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해 필요할 경우 각 전

문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에 전주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일환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진행 지원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가설건축물 정보표시관리제 시행

전주시 완산구는 가설건축물 정보표시관리제를 추진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정해 구청에 축조신고를 한 후 설치하며, 존치기간이 도래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7일전 구청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위반여부 확인 어

려움을 겪어왔다. /김영태 기자

이에 완산구는 가설건축물 정보표시관리제를 시행하며 가설건축물의 무단사용 및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 건축물로의 전환을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가설건축물 정보표시관리제는 건축주가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시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 처리 공문 및 필증 교부와 동시에 가설건축물 정보표시판을 부여하고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정보표시판에는 신고(허가)번호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건축주 뿐 아니라 누구나 해당 가설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문자서비스 병행 실시

완산구는 보행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장애들의 주차를 돕기 위해 장애인전용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및 주차그림까지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주차이용으로

인해 장애인주차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며 장애인주차 편의를 도모하며, 여기서 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의견진술 기회를 놓쳐 불이

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 우편으로 통지하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휴대용 문자로도 위반사실 및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알리는 서비스를 병행 시행한다.

이는 시민들의 위반사실에 대해 의견진술 기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율 증가 및 독촉 등의 행정절차 또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이번 시행하는 문자서비스와 사전통지문 우편 발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진퇴도를 높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